

영어신문의 외교사적 역할:

코리언 리퍼블릭 (1953.8.15~1954.8.14)의 사설을 중심으로

이선영*

한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영어 신문들이 창간되었다. 한국의 소식과 국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의견을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그 중 하나인 코리언 리퍼블릭(코리아 헤럴드 전신)은 1953년 8월 15일에 만들어져, 한국 외교 정책의 도구로 쓰였다. 당시 한국 전쟁 휴전협정이 조인되면서, 국제 정세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외교 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입장을 이 신문에 강력히 반영했다. 이는 오늘날 친숙한 미디어 외교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미디어를 통해 중요한 외교 인건이 다뤄졌음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국제무대에서 논의되는 한국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영어 미디어에 대한 연구다. 창간 이후 1년간의 사설을 분석한 결과, 코리언 리퍼블릭은 한국이 복지 통일을 목표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군사 및 경제 원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영어 신문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했으며, 재무장을 통한 일본의 팽창주의를 경계했다. 무엇보다 독도문제 등에 있어서, 한반도 수역에 관한 한국의 주권을 강조했다. 다년간 외교에 관해서는 당시 사회주의 입장이 우세한 국제여론이 전후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던 정치회담에 반영되는 것을 우려했다.

주제어: 영어신문, 미디어 외교, 대미 외교, 대일 외교, 코리언 리퍼블릭

1. 문제제기

20세기 초 조선은 “은둔의 나라”로 불렸을 만큼 그 존재가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1907년 이준 열사는 고종 황제의 특사로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보호조약의 부당성을 호소하려 했으나 회의장에도 못 들어갔다(최덕규, 2008). 이에 그가 낙담하여 자결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약소국 조선의 상징이 되었다. 영국의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사건과 2010년에 한국이 제 5차 주요 20개국 정상 회의의 의장국을 맡은 것을 대조시키며, 국제무대에서 1세기 만에 달라진 한국의 위상에 대한 기사를 썼다(Financial Times, 2010.3.16)¹⁾.

오늘날 국제무대에서는 미디어의 중요성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미디어가 국가 간 의사소통의 주요 도구로 쓰이는 현실이다. 이들 매체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리인 객관성을 앞세워 공정 보도에 힘쓰나, 미디어가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성을 보여온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정보화시대에 대의 협상에 있어서 미디어는 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뛰어난 기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또 평화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종종 외교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Gilboa, 2000).

미디어 프로그램은 주로 자국의 언어로 제작되지만 국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상 국가의 언어로 제작되기도 한다. 현재 한국에는 우선 상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지 않은 영어 미디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한 외국인들에게 한반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한국의

*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객원교수(sylee@handong.edu)

1) Christian Oliver & David Pilling (2010.3.16). South Korea : Into Position, *Financial Times*.

문화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이선영, 2000).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국가간 문화 접촉을 통해 각국의 문화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서정우, 1997). 또한 국제 보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뉴스 보도량의 증가에 따른 다른 국가에 대한 지식이 그 국가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 Perry, 1990).

영어 미디어는 1950년 6·25 동란 이후 본격적으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쓰이기 시작했다. 한국전에 참전하고 있던 유엔 장병들에게 국내의 뉴스를 제공하고 한국 정세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1950년에 코리아 타임스가 창간되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불안한 한반도 처리와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미국과 팽팽한 협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1953년 광복절에 ‘코리아 리퍼블릭’(Korean Republic, KR)이란 제호의 영어신문을 창간했다. 이는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사정과 입장을 대외에 알리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됐다(홍순일, 2003).

국문신문이 일차적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과 세계를 보여주는 창이라면 영어신문은 한국인의 살아가는 모습과 그 입장을 우선 외국인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한국인 독자들에게는 해외 소식을 영문으로 전하는 부차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인 중 국제교류에 직접 참여하는 외교관들이나 무역회사의 사원이나 공무원 등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영어신문을 빠짐없이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수, 정태연, 1976).²⁾

본 연구는 비영어권에서 발행하는 영어신문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거의 전무한 가운데 코리아 헤럴드의 전신인 ‘코리아 리퍼블릭’의 사설을 분석함으로써, 비영어권 국가에서 만들어진 영어신문이 대외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본다.

2. 맥락연구

1) 영어신문 저널리즘과 그 역사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민영신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1896년 4월 7일부터 서재필 박사(Philip Jaisohn)의 주관하에 발행된 독립신문이다. 미국에서 오랜 망명 생활을 하던 서재필은 1896년 1월 1일 서울로 돌아와서 4월 7일에 독립신문을 창간했다. 독립신문은 주 3회 총 4면을 발행했는데 제 4면이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라는 제호의 영어판이었다. 한국 최초의 영어신문은 이렇게 한글판 독립신문의 자매지로 발간되었다. 영문판 발행의 목적에 대해서는 창간호 영문 논설에서 “외국 사람들이 조선 사정을 자세히 모른, 즉 편벽된 말만 듣고 조선을 잘못 생각할까 보아 사정을 알게 하고자 하여 영문으로 조금 기록함”이라고 밝히고 또한 영어를 말하는 한국인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정진석, 2003).³⁾

2) 1970년대 1980년대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에서 실시한 독자조사 결과 독자의 반수 이상이 내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김용수·정태연, 1976).

3) “We make it bilateral because this will act as an incentive to English speaking Koreans to push their knowledge of English for its own sake. An English page may also commend the paper to the patronage of those who have no other means of gaining accurate information in regard to the events which are transpiring in Korea.” 독립신문 창간호 영문 논설에 나타난 영문판 발행목적.

독립신문이 등장하던 시기는 국내외적으로 격변기였다. 밖으로는 열강세력이 침략의 손길을 뻗치고 있었고 나라 안의 정치 상황도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 등으로 어지러웠다. 서재필은 이 신문을 통해 국내 정치 체제와 사회를 개혁하고 민중을 계몽하면서 국가 근대화를 조속히 실현하려고 했다. 그는 첫 사설을 통해 “한국민의 이익”, “한국민에 의한, 한국민을 위한 한국” 등을 제창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활기 있는 인상을 주려고 했다(임근수, 1970).

영문판의 지면 구성은 논설, 한국 관련 뉴스와 기획기사로 나뉘었다. 영어판은 이듬해 1897년 1월부터 본지에서 분리되어 격일제로 총 4면으로 발행되었으며 구독료가 한글판보다 2~3배 비쌌다. 수구파의 압력에 밀려 서재필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운영권은 윤치호가 맡았다. 이후, 1898년 7월부터 국문판이 일간으로 발행되었으나 독립협회 사건으로 제작진이 와해되었다. 한편 영문판은 주 2회 발행되다가 1899년 12월 4일 442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고 말았다(김민환, 1996).

1904년 7월부터는 대한매일신보가 국영문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되었다. 이 신문은 러일전쟁을 취재하러 온 런던 데일리 크로니클(The London Daily Chronicle)의 임시 특파원 영국인 베텔(Ernest T. Bethell)이 양기탁과 공동으로 발행했다. 1,2,3,5면은 영문판(The Korea Daily News)이고 4,6면은 국문판 대한매일신보였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한국을 통치할 의도를 노골화시키자 조선 내에서 항일운동이 구체화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을 규탄하는 영어 기사를 통해 조선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에 일본 통감부는 대한매일신보를 1910년 5월 21일부로 인수하고 8월 28일자로 종간호를 발행했다. 8월 30일에는 제호를 매일신보로 바꾸면서 이를 일본 통감부 기관지로 만들었다. 1904년 일본은 러일전쟁의 전황을 일본 국민과 주변 열강에 알리기 위해 서울 데일리 블틴(The Seoul Daily Bulletin)을 발행하고 1906년부터는 주간지 서울 프레스(The Seoul Press)를 발간한다.

해방 이후 영어 신문은 발행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적인 상황과 시대상을 예민하게 반영했다. 일제가 물러나자 영어신문은 한국어 신문보다 더 일찍 창간되었다(정진석, 2003). 남한에서는 코리아 타임스(The Korea Times), 서울 타임스(The Seoul Times), 유니언 데모크라트(The Union Democrat) 등 영어신문이 다수 출현했고 국문지에도 영문사설과 기사가 동시에 실렸다고 전해진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신문은 코리아 타임스(The Korea Times)로서 같은 제호로 세 번이나 발간되었다.

1950년 11월 1일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코리아 타임스의 창간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50년 6·25사변이 발발한 직후 9월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면서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하던 중 10월 19일 중공군이 개입했다. 전쟁이 확산일로를 치닫고 국제정세가 미묘해지자, 한국의 실정과 주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특히 참전 중인 미국과 기타 유엔군에게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영어신문이 긴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 조속한 발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여 당시 공보처장이던 김활란이 신문 발간의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창간 초에는 3000부를 발행했고 1·4후퇴 이후 부산에서는 8,000부까지 인쇄했으며 주 독자층은 주한 외국공관과 관공서였다(홍순일, 2003).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국회에서 야당의 세력이 우세해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그는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을 야기했다. 그러자 코리아 타임스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처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우며 코리아 타임스가 정부의 그늘을 벗어나자, 이승만 정부는 대외홍보의 기능을 대신할 새로운 영어신문 코리아언리퍼블릭(The Korean Republic, 코리아 헤럴드(The Korea Herald)의 전신을 창간하기로 결정했다(홍순일, 2003).

1953년에 창간된 코리언 리퍼블릭(Korean Republic, KR)은 창간사(Where we stand)에서 이 영어신문은 국내 독자에게 세계 뉴스를 전하는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 및 해외 독자들에게는 한국 소식을 알리는 믿을 만한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목표 및 기능이라고 밝혔다.

“영어신문의 발행은 더 가까워지고 더 중요해지는 한미 관계와 동서양 관계를 상징한다. 우리는 내국인에게 서양의 정책과 발전에 관해, 또 해외에는 국내 사건과 한국인의 의견을 알리려고 한다. (···) 우리는 정부의 중요한 문서와 국내의 정책을 보도하여 역사의 기록을 찾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을 믿는다.” (코리언 리퍼블릭(KR), 1953.8.15)

라이노 타이프와 현대식 설비를 갖추어 출발한 코리언 리퍼블릭은 로스엔젤레스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문학 교수인 윌리엄 글렌(William Glenn)을 고문으로 초빙하였다. 글렌이 사설을 쓰면서 신문은 본격적인 영어신문으로 갖추어 졌다.

1950년대 이후에는 코리아 헤럴드와 코리아 타임스가 한국의 영어신문 시장을 지배했다. 그러다가 2002년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이 중앙일보와 손을 잡고 아이에이취티 중앙 데일리(IHT-Joongang Daily)를 발행하면서 지금은 3개의 영어신문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영어신문들이 한국과 국제 사회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국문신문에 비해 매우 적다. 신문사(史) 부문만 보더라도 국문신문에 관해서는 수많은 논문과 저서가 출간되었지만 영어신문을 다룬 저서는 언론학자 정진석과 코리아 타임스 편집국장 출신 홍순일, 박창석이 공저한 “한국 영어 신문사”(2003) 가 유일하게 있다. 또한 논문의 경우도 “한국에 있어서의 영자신문 생성 발전과정”(임근수, 1970) 외에 “영어신문 활용을 통한 중학생의 독해 능력 향상”(김경훈, 2011) 등 교육 관련 논문들이 몇 개 있을 뿐이다.

2) 한미관계

1950년대 미국과 한국에서의 주역은 20세기 역사에서 영향력이 지대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1953~1961)과 철저한 지미주의자였던 이승만 대통령(1948~1960)이다. 1950년대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을 냉전의 전초기지로 정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한 시기이다.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도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독자적으로 개척하고 미국과 소련의 간섭과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전환의 시기이기도 했다(차상철, 2001).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반공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건국 초기부터 미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장훈각, 2011). 미 점령군의 철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1949년 5월 중순,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과 유사한 태평양 조약 또는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협정을 체결하거나 혹은 한국이 침공을 당할 경우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개적인 약속을 받아내려고 노력했다(차상철, 2001).

그러나 미국측 반응은 싸늘했다. 1947년 9월 미 국무장관 마셜(George Marshall)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과소평가한 각서를 미 육군 참모부로부터 받았다고 전한다.⁴⁾ 1950년 1월 12일에는 미 국무장관 애치슨(Dean G. Acheson)은 미국의 방위선이 알류산 열도로부터 일본과 리우큐 군도를 거쳐 필리핀에

이르는 지역에 근거를 둔다고 발표함으로써, 방위 범위에서 한반도를 제외시켰다. 또한 그해 5월 미 상원 외교분과위원회 의장인 코넬리(Tim Connally)는 “미국은 소련이 한국을 점령할지라도 아마도 거의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Caridi, 1968).

그러나 6·25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에치슨은 후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것은 극동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는 모든 집단 안보보장기구에 대한 도발이었다. 그것은 또한 모든 신생국들에 대한 위협이기도 했다. (...) 이것은 우리의 집단 안보체제가 위기를 극복하여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산산조각이 날 것인지를 알아보려는 일종의 시험이었다.”(양대현, 1992)

국제연합이 한국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한반도 공산화에 실패한 공산주의 진영은 한국 전쟁 이전의 현상으로 되돌아가는 단기적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휴전협정의 조인도 그러한 전략의 일환이었다(장준갑, 2002).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에 강력히 반대하며, 오직 남한의 주도하에 독립적이고 통일된 한반도 건설을 보장하라고 미국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⁵⁾

한미 간의 협력 관계는 전쟁 말기에 가서 두 나라간의 근본적인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위기에 직면한다. 그 이유 중에는 미국이 한국의 국가 존립과 관련된 문제들을 당사자인 한국과 사전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던 일들이 있다. 한국이 전쟁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을 휴전 회담에서 배제시켰던 것이다. 미국의 이런 태도에 이승만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6·18 반공포로 석방’을 감행하여 미국과의 동맹위기를 초래했다. 그때부터 이승만은 더욱 강하게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했다. 특히 주권 문제와 같은 한국의 운명에 관계되는 문제는 절대로 침해 당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정상적인 동맹 관계라면 거의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는데, 한미동맹의 경우 전쟁의 말기에 가서는 전쟁 초기와 달리 강대국 미국이 약소국 한국에 협의해 올 정도로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양대현, 1992).

1950년대의 한미갈등에 근거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정책을 “민족주의” 또는 “애국주의” 적인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김일영, 2004, 박태균 재인용). 박태균(2009)은 1950년대의 갈등이 이승만 정부가 단지 ‘제국’의 질서에 종속되어 미국의 정책에 순종한 정부가 아니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3) 한일관계

일본에 대한 한국의 외교는 강경했다. 한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며, 일본이 한국을 다시 침략할 지도 모른다는 경계를 풀지 못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다가 미국으로부터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라는 압박을 받게 된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북한—소련—중공으로 묶인 공산주의를 아시아에서 차단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지역에서 미국 냉전전

4) “합동참모부는 군사 안보적인 견지에서 미국이 한국에 있는 현존의 군대와 기지를 유지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 아시아 대륙에서 수행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공격 작전에도 거의 심중팔구는 한반도 밖에서 감행될 것이라고 믿는다.”(차상철, 2001, Harry S.Truman, Memoiren 재인용).

5) 이승만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 정책을 변경시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약소국 한국의 지도자가 강대국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한 국민에게 주어서 독재와 부패로 실추된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미국으로부터는 더 많은 군사경제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장준갑, 2002).

략의 중심적 역할을 요구받던 일본은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미국의 전략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공산권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무역을 하면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려 했다. 이러한 중립주의적 냉전 전략은 미국의 우려와 한국의 반발을 가져왔다(최희식, 2009).

냉전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한국을 군사적 지역통합 전략의 대상국으로 보지 않았다. 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교섭 시 미국은 일본의 안보를 고려한 차원에서 태평양 협정을 정책 의제로 올렸으나 여기에서 한국은 제외되었다. 또한 한국이 요구하는 한미 안보조약 체결에도 반대했다. 이는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로 상징되는 과도한 냉전전략으로 인해, 미국이 원치 않는 전쟁에 말려들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본다(최희식, 2009). 대신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에서 극동조약을 삽입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제일 미군이 유엔군의 형태로 개입하고 일본이 유엔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극동의 안보를 보장하는 방법을 구상했다.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시켜 단기적으로 일본이 스스로 자국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재무장한 일본이 극동안보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냉전의 본격화는 일본의 전략적 위치를 상승시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재편 전략이라는 냉전전략을 잉태했다. 그 외중에 한국은 군사적 지역통합전략에서 배제되고 경제적 지역통합 전략에서도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통합의 한 객체로 인식되었다. 이런 냉전 전략은 한국의 반발을 초래했다(최희식, 2009).⁶⁾

4) 다자관계와 협상

휴전협정은 한반도에서 평화적 해결이 나오기까지 모든 군사적 행동과 적대행위를 멈추기 위한 잠재적 조처였다. 휴전협정 조인 후에는 주요 관심이 한국 문제 처리를 위한 정치협상에 모아졌다. 특별히 1954년에 열린 제네바 회담을 앞두고 한미 관계를 보면 이 회담을 둘러싸고 한국 전쟁 시기, 특히 휴전을 막바지에 두고 벌인 한미 간 시소 게임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태도는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카드가 부족할 때 현실적으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승만으로서는 어떤 정치 회담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는 통일 없는 휴전에 반대해왔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았지만 전쟁 재개를 외쳐온 그에게 대화를 통한 정치적 타결은 딜레마였기 때문이다(황인수, 2000).

한국정부가 다자 간 정치회담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득실을 놓고 참여하는 회의에서 오히려 한국의 입지가 좁아져 한반도 통일이 무한정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회담참가 강대국 간의 은밀한 양해 속에서 한반도와 인도차이나 문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패키지 딜(Package Deal)로 처리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식민지 기간 중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약을 통해 필리핀을 합병한 대가로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한국 문제로 열리는 정치회담에 한국의 참여가 없이는 실질적인 회담이 될 수

6) 아이젠하워 정부에 이르러서야 미국의 냉전 전략 속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한국과 동맹관계를 맺는데 소극적이었으며 이승만 정권의 협박외교로 한미 안보조약은 체결되었지만 미국은 한국의 과도한 냉전전략을 억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최희식, 2009).

없다는 것을 알고 회담 참가 여부를 놓고 이를 미국과의 협상 도구로 삼았다. 이승만은 다가올 회담에서 간섭 없는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해 회담이 열리기 전에 미국과의 대화를 회피하였다. 이 때문에 미국은 회담에서 운용할 공동 전술의 채택을 어렵게 만드는 이승만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비판적이었다. 델레스 국무장관은 제네바회담에서 중공이 이런 한미 간의 불화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했다(황인수, 2000).

그러나 제네바 회담이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어느 국가도 한국 통일에 대한 결론을 내는 데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회담 내내 주요 참가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만을 내세웠다. 프랑스와 영국은 중공과의 타협으로 인도차이나 문제가 해결될 것 기대했고, 중공은 그들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아시아 문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대접받기를 바랐다. 한국이 이 회담에서 갖는 최대의 의의는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최초로 주요 국제회담에 참가하였을 뿐 아니라 회담 내내 중요한 역할(협상, 결론, 조직구성)을 했다는 점이다(변영태, 1959; 한표욱, 1984).

이승만은 제네바 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안보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냈다. 미국도 한국 전쟁이래 미국의 반공 정책의 동반자가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어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같은 철두철미한 반공주의자에게 심정적 공감대를 갖게 되었다(황인수, 2000).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950년대는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던 시기였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으로 말미암아 남북 분단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공산세력이 확장되는 당시 국제 정세를 볼 때 대한민국도 공산화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반대와 북진 통일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개진했다. 특히 광복 8주년, 정부수립 5주년에 창간된 영어신문 코리아 리퍼블릭이란 미디어를 통해서 주도적인 대외정책을 폈다.

대외정책의 목적은 국가 이익의 추구하고 보존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외정책의 분석도구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중심개념은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다. 국가이익의 개념은 역사적 산물이며 국가나 국제체제의 형태에 따라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1) 국토의 방위(국가안보) (2) 경제의 번영 (3) 자국의 가치증진 (4) 호의적인 또는 유리한 국제질서의 창출은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국가이익의 기본 내용이 된다(구영록, 1994).

과거에는 국가 이익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대통령과 소수 정책 엘리트들의 독점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와 국제 정치의 개념은 변하고, 정치적 민주화로 말미암아 국가 이익의 결정 과정에도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교통, 통신 등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동의나 지지 기반이 약한 정책은 수행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구영록,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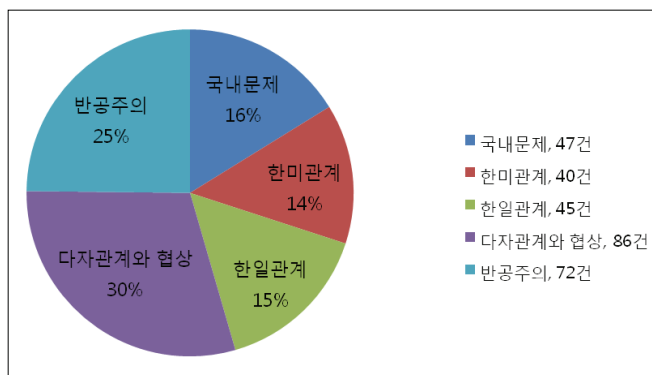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미디어가 외교 무대에 나서게 되었다. 미디어를 통한 정보누설이 국제회담에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국가 간에 이해와 합의를 증진시키는 미디어의 공시 능력(ability to publicity)은 주목 받지 않았다. 데이비스는 미디어가 회담 중인 의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부기관 사이의 조정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며, 관련된 정부들 사이에서 외교에 필요한 보조 의사소통 채널이 되어준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는 외교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외교관들은 다수의 신문과 잡지들을 구독하고 여러 방송 뉴스를 청취한다⁷⁾. 또한 모든 정부는 국내의 뉴스를 전달하는 산하 기관들을 가지고 있다(Davison, 1974).

새로운 시대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특징은 점차 더해가는 공시성이다.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전략적 정책 반응이 “공중 외교”(public diplomacy)이다. 정부는 공중 외교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공동체, 특히 안보공동체 (security communities)를 세워 나간다(T. Sheaffer & S. Shenhav, 2009). 앤트만(2008)은 미디어를 통한 공중 외교란 한 국가의 정부가 해외 미디어에 본국의 정책을 보도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직적 시도라고 정의했다. 세퍼와 센하브는 전쟁과 갈등 시기의 공중 외교를 전통 외교의 한 모양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정책 분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정부는 1953년 7월 27일 휴전 회담 직후인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영어신문 ‘코리언 리퍼블릭(The Korean Republic)’을 창간했다. 이승만은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 구도에서 한국과 같은 약소국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간파하고(홍용표, 2007), 이 영어신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외에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코리아 헤럴드 사사편찬 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창간호부터 외국인 논설위원들이 사실 내용과 논조를 이승만 대통령과 직접 논의하면서 썼으며, 1961년 2월 이후에는 한국인이 쓴 사실이 등장한다.

이 연구는 ‘코리언 리퍼블릭’의 창간호로부터 1주년을 분석 범위로 잡았다. 자료는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코리아 헤럴드 신문의 마이크로필름을 복사하여 얻었다. 이 기간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이후 한반도 문제가 국제무대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시기였으며 당시 사실의 60%가 외교 문제에 할애되었다. 창간일인 1953년 8월 15일부터 1954년 8월 14일까지 게재된 총 사실 수는 301건이다. 그 중 7건은 뉴욕 타임스 등 해외 신문에 한국과 관련해서 나온 사실, 그리고 4건은 코리언 리퍼블릭의 사실 편집 방향을 설명한 글이라 범주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분석범위에 들어간 코리언 리퍼블릭의 사실 수는 총 290건이다. 290개의 사실은 주로 1953년 9월 16일과 10월 9일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하나씩 실렸다. 이 사실은 다음의 5가지 주제로 연구자에 의해 분류되었다.



<그림 1> 사실의 5가지 주제

7) 주한 외국인의 뉴스 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여러 직업군 중에서 특파원과 외교관이 가장 많은 수의 미디어를,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동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영, 2006).

국내 문제 사설은 한국 내 경제 문제나 정책 방향, 또는 한국의 대외입장 등을 다루었다. 한미 관계 사설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외교 문제나 경제 원조 등을 다루며, 한일 관계 사설은 일본에 대한 의견이나 한일 회담, 관계 정상화, 어업 협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자 관계와 협상 관련 사설은 유엔 관련 기사, 제네바협상, 판문점 회담, 베를린 회담 등을 둘러싼 문제점 등을 살피고 있다. 반공주의라는 범주는 나머지 4개 주제와 성격이 다르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이 해당 사설의 중심 주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설 분류 기준으로 선정했다.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통해서 창간 초기 코리언 리퍼블릭이라는 영어신문이 국익 추구를 위해 어떻게 대외 정책 도구로 쓰였는지 살펴본다.

- 1) 한미관계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는가?
- 2) 한일관계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는가?
- 3) 다자관계와 협상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는가?

4. 내용분석 결과

1) 한미관계

한미관계는 한국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한일관계, 다자관계보다 긍정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제목들을 살펴보면 “한미재단”(American Korean Foundation)(KR 1953.8.20), “놀랜드 상원의원, 환영”(Welcome Knowland)(KR 1953.8.28), “덜레스 장관의 연설”(Secretary Dulles’ speech)(1953.10.9), “닉슨 씨에 대한 따뜻한 환영”(A warm welcome Mr Nixon)(KR 1953.11.12), “한국의 기본적인 필요”(Korea’s basic needs)(KR 1953.11.14) 등이 있다.

그러나 사설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한국은 미국의 대외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으며 경제 지원 뿐 아니라 군사 지원까지도 한국의 상황에 맞게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이승만 정부의 외교 정책이 외견상으로는 북진 통일과 반일 정책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미국으로부터 가급적 많은 지원과 원조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김일영(2000)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 한다.

코리언 리퍼블릭은 9월17일에 실린 “인내심과 썸 아저씨”(Patience-and Uncle Sam)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에 대한 찬사를 보낸다. 국제 무대에서 약하고 겁 많은 유회론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는 인내심을 보이는 미국이 한국인들에게는 찬탄의 대상이라고 추켜세웠다. 신문은 유럽 제국들이 미국을 신생국이라 경솔하고, 충동적이고 무모하다고 묘사하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라고 단언한다.

1954년 3월 11일에 실린 미국과의 관계(Relations with America)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20세기 국제무대에서 한국에 악영향을 끼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진다. “왜 한국인들은 1950년에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출해주고 또 재건을 위해서 수천만 달러를 원조하는 미국을 보고 고마워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인들의 심경이 복잡하다고

밝힌다.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 사실을 두고 느끼는 고마움은 어마어마(immense)하다면서 한국은 미국을 자신의 가장 큰 친구로 여긴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미국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사실은 미국이 한국민을 역사 인식이 있는 국민으로 기억해야 하며, 과거에 미국이 한국을 여러 번 배신한 사실을 지적했다.

“첫째 테오도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1905년에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을 식민 통치하도록 허락했고 두 번째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 시절 미 행정부는 민족 자결권을 극동에게까지 확대하지 않았고 세 번째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한반도를 분단시키는데 동의했다. 네 번째 해리 트루만(Harry Truman)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력을 키워놓지 않고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켰다. 우리는 미국이 이런 과거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민족은 한반도를 잔인하게 두 쪽으로 나누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반도는 강대국 정치의 장기관 줄처럼 되었다”(KR 1954.3.11).

이날의 사실을 통해 한국은 1950년에 시작된 전쟁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손을 툰다. 한편, 미국은 한국을 도와줌으로써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속죄를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민이 겪은 전쟁의 고통과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비하면 미국이 치른 대가는 적다고 일축했다. 당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반추하고 또 미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두려움과 의심을 품게 된다. 그러나 솔직담백이 오해를 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문제점을 짚어보겠다. 우선 한국은 정전 협정을 반대한다. 이는 한국의 통일서약을 무너뜨리고 또한 자유세계를 패배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은 언제나 무익하다. 또한 제네바 협상을 통해 강대국들이 약소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심히 걱정스럽다. 당시국인 한국에게 의견을 묻은 적이 없이 유화 정책(appeasement) 방향으로 가고 있다.”(KR.1954.3.11)

또한 미국의 대일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은 아직도 동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build up) 정책을 채택한 것은 끔찍하고 값비싼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사실은 밝힌다. 또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미국이 두 나라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미국이 조정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즉,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국인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우월감에 빠져 조금하게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한국을 다시 일본의 지배하에 두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해 저항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 관계를 중재할 때 모든 사안에서 일본 편을 들었다. 미국은 한국인들이 평화선을 포기하고, (식민 통치하에서 일본이 가져간) 금궤(gold reserve)와 예술품들을 포기하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일본인들이 우리 독립과 주권에 대해 우리에게 쏟은 모욕과 도전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아무 법적인 근거도 없이 한국 자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KR 1954.3.11)

1953년 11월 12일에 방한한 닉슨에게 현재 전쟁 중인 나라에 미국 부통령이 방문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반겼다. “한 가지 문제—한 가지 해결”(One problem—one solution)이라는 사설의 제목에서 문제는 한반도가 부자연스럽게 서로 대치하는 나라로 나뉘어져 있다며 한국은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R 1953.11.13).

“한국의 기본적 필요”(Korea’s Basic Needs)라는 사설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 원조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당장 소모되고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소비재로 주어질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필요로 하는 기초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료를 가공하고 계속 유용한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콘크리트 공장, 목재소, 섬유공장 등이 지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택에 관해서는 이백만 채의 집을 건설해야 하는데 그 중에 백만 채는 당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건설업체들을 일으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체들을 만들어야 직업이 생기고 수입도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고용이야 말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국민이 계속적으로 물자를 공급받을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KR 1953.11.14).

“미국 관리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An Open Letter to the US governors)에서도 미국이 지난 6년간 보내준 원조와 전후 구호물자에 대해 감사하지만 한국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장, 발전소, 교통시설, 체신 시설 등 산업 시설의 건설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R. 1954.5.25).

2) 한일관계

제 1공화국 외교정책에서 반일정책이 중요한 기조인 것이 코리언 리퍼블릭의 한일관계 사설에서도 나타난다. 사설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일본에 대한 경계와 긴장, 그리고 비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설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 안보 대 일본의 재무장”(Asian security vs Japanese rearmament) (KR 1953.9.20), “일본은 사죄해야 한다”(Japan must apologize) (KR 1953.11.6), “일본의 새로운 위협”(Japan’s new threats)(KR 1954.1.29), “일본의 상존하는 위협”(Japan’s ever present threat)(KR 1954.3.12), “일본의 협박을 폭로함”(Exposing the Japanese threat) (KR 1954.4.11), “위협은 커진다”(Menace grows) (KR 1954.7.1)

1953년 9월 8일자 코리언 리퍼블릭의 “일본의 백서”(The Japanese “White Paper”)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일본 총리청이 급증하는 자국 인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10년 안에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섬만한 영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사실을 실었다. 이에 사설진은 일본이 남의 영토를 강탈하던 시절은 일본이 1945년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면서 끝났으니 현재 있는 일본 영토나 잘 이용하라고 충고했다.

1953년 9월 20일자 “아시아 안보 대 일본의 재무장”(Asia security vs Japanese rearmament)에서는 영토 확장에 대한 일본의 결의를 다시 언급한다. 이에 관해 이른바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야욕이 아시아에 압권이 퍼진다고 설명하며 일본의 재무장에 반대했다. 또한 지난 과거 역사를 돌아볼 때 한국은 한 번도 일본을 침략하거나 위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쓰라린 과거 때문에 일본을 미워하거나 복수할 마음은 없지만, 대한민국의 재건을 도와준다는 미명 아래 일본이 한국에 침투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53년 10월 1일 “해안 경계선의 정당성”(Legality of our maritime demarcation line) 사설에서는 일본이 문제 삼은 평화선⁸⁾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평화선 선언으로부터 8개월 후, 클라크

국제 연합군 사령관은 북한의 잠입을 막고 전지 밀수품의 해상 침투를 봉쇄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에 해상 방위 수역을 설정한다. 사실은 이른바 “클라크 라인”(Clark Line)으로 불린 이 수역과 평화선이 거의 일치하는 사실을 언급하며, 클라크 라인의 설정은 평화선 선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53년 10월 6일 개최된 제3차 한일회담 이후, 10월 10일자 사설 “한국과 일본”(1)(Korea and Japan)에서는 한국이 일본과는 “끔찍하게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다(We have been having trouble with the Japanese for an awful long time. Much too long!). 이 사설은 과거 왜구의 한반도 침략부터 임진왜란, 또한 일본 식민지 시대의 수탈 등 한국인들이 일본인들로 인해 당한 역사적인 고통들을 상기시켰다. 1953년 10월 12일자 “한국과 일본”의 두 번째 시리즈를 통해서는 1951년 10월, 1952년 4월, 1953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열렸던 한일 회담 결렬이 일본 측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한일 회담에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 양국의 꾸준한 교역을 위한 무역 협정 체결, 재일 교포 법적 지위, 대마도, 독도 문제, 태평양 전쟁 직후에 일본 영해에 있던 한국 상선 반환, 한일 어업 문제 등이 다뤄졌다.

1953년 11월 6일자 “일본은 사죄해야만 한다”는 사설에서는 10월 15일 한일 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대한민국 건국은 불법이고 이는 국제법에 어긋난다. 한국에 있는 일본 재산을 미군이 처분하는 것도 불법이고 국제법에 어긋난다. 연합군 측의 카이로 선언은 단지 전쟁 히스테리의 표현에 불과하며 우리는 그런 선언을 감행한 사람들의⁹⁾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 일본의 한반도 식민통치 기간 36년은 한국에 유익했다.”¹⁰⁾ (KR 1953.11.6)

1954년 1월 16일자 “같은 배 위에서”(In the Same Boat)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한일 회담의 일본 대표단 단장인 구보타가 내뱉은 헛소리를 거둔다면 한국은 석 달 이상 중단되어 온 한일 회담에 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1954년 1월 29일자 “일본의 새로운 위협”(Japan's new threats)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과거 식민 통치를 통해 한국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또한 일본이 한국을 침범한 역사의 기록은 길고도 충격적이라고 밝힌다. 일본은

-
- 8) 한국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한반도 주변에 부분적으로 최장 200 해리에 육박하는 수역과 해저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고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당시 국제적인 추세였으며 한국 측에서 볼 때는 일본 어선의 남획과 국내 어업의 열악한 실정상 한반도 연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 조약에 따라 일본이 한국과 어업 협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회피하므로 부득이 한국이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은 공해 자유의 원칙상 당사국의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배타적 어로수역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이며 평화선을 폐지하여야만 한일회담이 타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인섭, 2006).
- 9) 코리언 리퍼블릭의 편집자주에 의하면 한일 회담의 일본대표인 구보타가 언급한 카이로 선언을 인물들 중에 문제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윈스턴 처칠이다.
- 10) Establishment of the Korean Republic was illegal and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 disposal of Japanese properties in Korea by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was illegal and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 the Cairo Declaration by the Allied Powers was simply an expression of wartime hysteria and I question the personal character of those who made the declaration (KR 1953.11.6).

식민통치 40년 동안 한국민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자원을 침탈해갔으며, 한국민의 자유를 잔인하게 억눌렀음을 상기시킨다. 그런 과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일본과 우호 관계를 맺으려 하지만,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의 해안 지대에 일 해군을 급파하겠다고 협박하고 터무니없게도 한국 자산의 85%를 되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평화선’을 일부러 침범하고, 훔쳐간 한국의 재산을 돌려주기를 거절했다. 사실은 미국이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두려하기 때문에 일본이 더 뻔뻔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일본의 팽창주의 야욕을 미국과 아시아가 알고 이를 저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속내의 새 증거”(New Proof of Jap. Intentions)라는 1954년 6월 24일자 사설에서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측에 항의하며 500년 전에 이미 한국이 원정대를 보내 주권을 확립했다고 반박한다. 당시 1953년 한해에 15,000 척의 일본 어선이 독도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평화선 안에 있는 이 한국 영토에서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량은 5억 파운드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그 주권이 한국에게 돌아간 독도에 대해 일본이 도전하고 있다. 이 섬은 지리적으로도 일본보다 한국에 훨씬 더 가깝다. 500여 년 전에 씌여진 이씨 조선의 궁중 기록을 보면 1483년에 이미 조선이 독도에 원정대를 보내어 그 주권을 확립했다” (KR. 1954.6.24)

3) 다자관계와 협상

한국의 운명은 다자간 협상에서 정해질 것인가? 코리언 리퍼블릭을 읽어보면 당시 사회주의가 힘을 얻어가던 국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전후 한국 문제를 다루기로 되어 있던 다자간 회담의 결과가 한국의 국가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노심초사했다.

1953년 10월 1일자의 “한국은 중립화될 수 있는가?”라는 사설에서 코리언 리퍼블릭은 당시 미국과 국제 연합이 한국 문제를 한반도 중립화로 매듭지으려 한다는 뉴욕 타임스의 기사를 들먹였다. 즉 남한과 북한에서 총선을 통해 통일 한국을 이룩한 후에 이를 공산주의로부터 안전한 중립국으로 만든다는 이 제안에 대해 코리언 리퍼블릭은 터무니없이 순진한 발상이라고 일축한다. 이런 제안을 만든 사람들이 당사자이자 합법적인 주권국가인 한국과 의논하지 않은 사실은 제껴두고 라도 자유국가들과 공산국가들이 싸우는 이 세계에서 한국이 도대체 중립국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결코 한국은 중립국이 아니며 결코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천명한다 (Korea is not neutral—nor will ever be!). 한국은 매우 명확하게, 분명하게 또 공격적으로 공산주의를 대항해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1954년 1월 27일자 “자유를 위한 아시아의 열망”(Asia’s Bid for Freedom)라는 사설에서는 휴전 회담이 쓰라림과 좌절과 분열을 남겼다고 밝혔다. 공산주의자들은 합리적인 제안에 트집을 잡으며 모욕과 욕설을 일삼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기회를 최대로 이용했다고 사설은 주장했다. 또한 국제 연합을 고무시켰던 자유에 대한 열망은 사라졌고 그 자리엔 유회주의자들의 수동적인 패배 의식만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제 유럽은 자유세계에서 더 이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고 오직 미국과 자유를 열망하는 아시아 국가만이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세계는 유럽으로부터 더 이상 도덕적 지도력을 기대할 수 없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과거 영광의 희미한 그림자가 되어버렸고 그 유명한 승리의 브이(V) 표시도 우스꽝스러운 풍자거리가 되어버렸다.” (KR 1954.1.27)

또한 군소 정당이 난무하는 프랑스도 혼돈 속에 빠져 있으며,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공산당이 가장 판치는 나라로 가톨릭 교회만이 과거 영광의 폐허 위에 도덕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한다. 오직 서독과 베네룩스 국가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만이 안정된 토대 위에 국가가 단합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세계의 지도력은 미국과 아시아 자유국가들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KR 1954.1.27).

1954년 4월 19일에 제네바 회의 참석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들에 맞서, 자유 세계가 단결하여 일치된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담의 참석을 반대하는 이유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과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물리치기 위해서 공동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이 참석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이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우방국들이 유화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제어하고 또 회담장이 한가한 토론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KR 1954.4.20).

“제네바에서의 결전”(Showdown at Geneva)의 제목을 가진 사설은 회의 첫 주간이 끝나고 있으나 한국과 인도 차이나 전쟁의 정의롭고 명예로운 평화 협정의 실마리가 안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한국이 예견한대로 회의장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장이 되었고 동아시아에서 그들의 군사력 증강을 위장하는데 이용되었다고 한탄했다(KR 1954.5.1.). “제네바에서의 어리석음”(Foolishness at Geneva)에서도 한국이 제네바 회담을 놓고 예측한 것이 맞아떨어졌다고 거듭 밝혔다(KR 1954.5.5).

코리언 리퍼블릭은 제네바 회담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토론을 계속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 회의를 통해 공산주의자들은 자유세계를 분열시켜 이들을 하나씩 정복하려고 한다고 강조하며 회의에서 제안된 평화안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화정책이나 공산주의가 인류를 노예로 만든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회담장을 나와서 적을 용감하게 직면해야 한다고 충고한다(KR 1954.5.26).

휴전협정에 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1954년 8월 3일자 “존재하지 않는 휴전협정”(The Truce that does not exist)이나 8월 9일자 “휴전협정-적의 무기”(The Armistice-An Enemy Weapon) 라는 사설들의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다. 8월 3일 자 사설에서는 한국의 휴전협정을 감독해야 할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반이 소련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중립도 아니고 감독도 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선전만을 일삼으며 휴전협정을 어기면서 북한에 그들의 병력을 증강시킬 뿐 아니라 그 불행한 지역을 중공에 예측시켜 한국을 재침공하려 하며 자유세계도 넘보고 있다고 주의를 준다. 그 사실은 한국뿐 아니라 유엔 감시단, 진정한(true) 중립국 감시위원단에게는 이미 알려져 있고 인정되고 있다고 밝힌다. 뿐만 아니라 제네바 회담도 공산주의자들을 문명사회의 일원으로 다뤘던 다른 비극적 사례와 함께 역사의 기록으로 묻혔다고 한탄했다. 그러므로 한국이 미국에게 한국과 휴전협정이 무효화된 것을 함께 선언하자고 요청하는 것은 한국이 정의와 진리의 편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런 코리언 리퍼블릭의 주장은 이승만의 북진 통일 정책과 맥을 이루고 있고 이는 한미 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박태균, 2009).

5. 결론 및 논의

코리언 리퍼블릭은 대미 관계 사설을 통해 한국이 미국과 긴밀한 안보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산주의를 저지하며 한반도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다. 또한 전후 복구 뿐 아니라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공장, 발전소, 체신 시설 등 기반 시설 건설 등의 경제 개발 원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20세기 초부터 미국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이 한반도에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를 설명하며 국제 회의에서 한국의 운명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때에는 반드시 당사국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한편 미국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설은 미국이 일본을 재무장시켜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제지하려는 정책을 취한 것은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단언하며 일본이 인접 국가들에 대한 침략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미 협상에 있어서 남북 통일이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되어 미국이 오히려 약자의 입장에서 이승만에게 휘둘렸다고 보는 견해도 참고할 만하다. 제네바 회담을 앞두고도 한국의 참석을 이끌어내려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은 필요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받아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일 관계 관련 사설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긴장과 경계 의식이 강하게 배어있다. 사설은 전후 일본이 식민지 한국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 조금도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불법이라며 한국 자산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한반도 식민 통치가 한국에 유익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 무엇보다 평화선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독도에 관해서도 500년 전에 원정대를 보내 주권을 확립했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며, 일본의 항복으로 올바른 주인에게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설은 제네바 협상을 비롯한 다자간 협상 등은 실패로 판명이 났지만, 한국은 나름의 국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주권 국가로 참석하여 한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회담에서 국가 정체성에 훼손이 가지 않는 결론을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소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코리언 리퍼블릭은 사설을 통해서 자신감이 가득하고 호전적인 기운이 물씬 풍겨나는 외교 전문가로 전 세계 정세를 철저히 반공주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휴전 후의 한반도 처리와 한국의 안전 보장을 위한 협상을 팽팽히 벌이던 상황에서, 코리언 리퍼블릭은 국제무대에서 미디어 외교 역할을 충분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코리언 리퍼블릭은 국익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 경제, 대외 관계 등 다방면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외교전을 펼쳤다.

코리언 리퍼블릭의 독자층에는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독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독자들도 포함되어 있어, 국가 외교 정책을 공시하는 한편, 국내 여론의 지지도 함께 얻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일제하에서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 독립 운동을 했고 신문¹¹⁾에 글을 썼던 초대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미디어를 십분 활용해 여론을 주도하고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또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외교전을 펼친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내정에서는 독재자로 얼룩진 이미지와 친일 청산을 해결하지 못해서(김영택, 2009) 부정적인 면모가 두드러지나, 코리언

11) 배재학당 학생회인 협성회는 1889년 1월 1일 주간신문으로 “협성회회보”를 냈다. 이 신문에는 양홍묵, 이승만, 유영석 등이 글을 썼다. 1898년에 창간된 데국신문에서 이승만은 이 신문의 주필을 맡았다. 이승만은 독립협회 사건으로 투옥되자 옥중에서 논설을 써 보내기도 했다(김민환, 1996).

리퍼블릭을 통해서도 능동적으로 효과적인 외교전략을 펼친 지도자로 나타난다. “애국에는 충신, 외교에는 귀신, 내정에는 등신”이라는 평가가 한 정치 지도자에게 대한 역사적인 평가로 지나치게 함축적이고 소략하지만 그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정용욱, 2007).

이 시기를 요약하는 제목을 “팽창하는 공산주의 전략에 말려가는 국제 정세에 필사적으로 대응한 한국 정부의 대변지”라고 뽑은 코리아 헤럴드 사사편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코리언 리퍼블릭은 정부를 비판할 여지가 있는 사건은 비껴가거나 단순 보도만 하였다. 따라서 코리언 리퍼블릭은 국내 정치에서는 정치 권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환경 감시 기능을 충분히 수행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에는 생소했던 미디어 외교가 오늘날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에 1950년대에 이미 미디어를 통해 당사국의 언어로 직접 당사국과 국내 여론에 외교 정책을 공시하며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외 협력을 통해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책과 국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해외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외교 통상 부문에서 공식적인 외교 채널 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특히 대상 국가의 언어로 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대외 정책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Ⅰ 참고문헌

- 구영록 (1994). 대외정치의 핵심개념으로서의 국가이익. 『한국과 국제정치』, 제19호, 1~14쪽.
- 김경훈 (2011). 영자신문 활용을 통한 중학생의 독해능력 향상.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1권 4호, 477~484. 한국콘텐츠학회.
- 김민환 (1996).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출판사.
- 김보영 (2009). 한국전쟁 시기 이승만의 반공포로석방과 한미교섭. 『이화사학연구』, 제38집, 183~206쪽. 이화사학연구소.
- 김성해 (2008). 국가 이익과 언론.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42호, 205~248쪽.
- 김영택 (2009). 친일 미청산의 배경과 원인. 『한국학 논총』, 제31권, 481~539쪽.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김일영 (2000). 이승만 정부에서의 외교 정책과 국내 정치. 『국제정치 논총』, 제39집 3호, 243~262.
- 김용수·정태연 (1976). 독자권 늘여가는 영자신문. 『신문과 방송』, 제69호, 15~21쪽.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태균 (2009).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의 갈등. 『역사비평』, 통권86호, 86~112쪽. 역사비평사.
- 변영태 (1959). 『외교요록』. 한국일보사.
- 서정우 (1997). 『국제커뮤니케이션론』. 서울: 나남출판사.
- 유근하 (1994). 국제화시대, 영자신문의 위상과 역할. 『신문과 방송』, 제279호, 88~91쪽.
- 이선영 (2000). 주한 외국인의 뉴스매체 이용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 (2006). 주한 외국인의 뉴스 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제6호, 77~108쪽.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 임근수 (1970). 한국에 있어서의 영자신문의 생성·발전과정. 『언론정보연구』, 제7집, 142~149쪽.
- 장준갑 (2002). 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 (1953-54). 『미국사 연구』, 제15집, 134~155쪽.
- 장훈각 (2011). 이승만 대통령과 한미동맹: 동맹의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42집 1호, 131~163쪽.

- 정용욱 (2007). 홍보, 선전, 독재자의 이미지 관리: 1950년대의 이승만 전기. 『세계정치8』, 제28집 2호, 11~50쪽.
- 정인섭 (2006). 1952년 평화선 선언과 해양법 발전. 『서울국제법 연구』, 13권 2호, 1~28쪽.
- 조운수 (2008). 평화선과 한일어업협상. 『일본연구논총』, 제28호, 199~223쪽. 현대일본학회.
- 차상철 (2001). 아이젠하워, 이승만 그리고 1950년대의 한미관계. 『미국사 연구』, 121~167쪽.
- 천시영 (1998). 영자신문기자(미디어 전문직의 세계). 『신문과 방송』, 제327호, 84~87쪽.
- _____ (2003). KH 창간 50년: 영어신문 세계화로 중요성 증가, 정부지원 필요. 『신문과 방송』, 제392호, 69~73쪽.
- 최덕규 (2008).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와 러시아의 대한정책, 『한국사학보』, 제30호, 355~386쪽.
- 최희식 (2009). 이승만 정부 시기의 한일관계: 한미일 내전전략의 불협화음과 한일관계의 정체. 『세계지역연구 논총』, 27집 3호, 121~146쪽.
- 한표욱 (1984). 『한미외교 요람기』. 중앙일보사.
- 홍순일 · 정진석 · 박창석 (2003). 『한국영어신문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홍용표 (2007). 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이승만의 반공노선. 『세계정치』, 제28집 2호, 51~80쪽.
- 황인수 (2000). 한국전 이후 쟁점과 제네바협정. 『시민정치학회보』, 제3권, 83~107쪽. 코리아 헤럴드 사사편찬 위원회 자료.
- Caridi, Ronald J. (1968). *The Korean War and the American Politics: The republican party as a case stud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Christian Oliver & David Pilling (2010.3.16). South Korea: Into Position. *Financial Times*.
- Davison, W. Philips (1974). News media and international negotiation.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38(2), 174~191.
- Entman, Robert M. (2008). Theorizing mediated public diplomacy: the US cas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3(2), 87~102.
- Gilboa, Eytan (2000). Mass Communication and diplomacy: a theoretical framework. *Communication theory*, 10(3), 275~309.
- _____ (2005). Media-Broker diplomacy: when journalists become mediators. *Critical Studies in the media communication*, 22(2), 99~120.
- Messner, Marcus & Garrison, Bruce (2006). News for the world: A case study of English language newspapers in China.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1~30.
- David K. Perry (1990) News reading, knowledge about and attitudes toward foreign countries, *Journalism Quarterly*, Vol.67(2), 353~358.
- Sheafer, Tamir & Shenhav, Shaul (2009). Mediated public diplomacy in a new era of warfare. *The Communication Review*, 12(3), 272~283.
- Taylor, Philip M. (1997). *Global Communications, International Affairs, and the Media since 1945*. London: Routledge.
- Korean Republic 1953.8.15-1954.7.12 Editorials in Microfilm in Ewha Women's University Library

(투고일자: 2011. 8. 31, 수정일자: 2011. 10. 27, 게재확정일자: 2011. 11. 2)

ABSTRACT

Korean English-language Newspapers as Tool of Public Diplomacy: Case Study of Editorials of Korean Republic

Sunyoung Lee*

Since the end of the 19th century, Korean English-language newspapers have been published in Korea to inform readers about Korea and Korean people's point of view concerning world problems. Among them was the *Korean Republic (KR)*, the former name of the *Korea Herald*, founded on August 15th, 1953 (Korean Liberation Day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is newspaper was started especially to report on international affairs, just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on July 27th, 1953, at the initiative of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yngman Rhee. He vehemently expressed his and the Korean people's opinion about Korean problems in world politics where big powers were dominating and deciding small countries' destinies. This paper is written to show that Korean English-language newspapers were used as tool of public diplomacy not only for the readers of target countries but also for Korean readers, well before the media diplomacy theory became popular several decades later. In the deplorable world situation where Korea was colonized and divided into halves by the wills of the super powers, the Korean media participated actively via dialogue in English to solve the Korean problem. This paper studies the editorials of the *KR* for one year, the year just after its foundation. Vis-a-vis the United States, the *KR* defended its political system of free democracy by insisting on the Korean people's hopes, the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and acquiring American assistance in economic and military areas. Regarding Japan, Korea had doubt about its expansionist policy by way of rearmament. First, the Korean government tried to defend its territorial waters, including Dokdo Island. As for multi-lateral relationships, Korea was concerned about the spread of communism to its territory in the world where socialism was dominating.

Keywords: Public Diplomacy, Korean English Newspapers, *Korean Republic*, *Korea Herald*, Foreign Policy
Vis-a-vis US, Japan, Multi-lateral Conference

* Guest professor, Handong Global University